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해외조세동향보고

Issue 9, 2009년 10월

금융위기가 조세행정에 미친 영향

2009년 10월, 제62차 OECD 국제조세세미나에서 Mr. Richard Parry가 (OECD본부 조세정책행정센터 비회원국협력사업과장) 발표한 "Impact of the Financial Crisis on the Tax Administration" 강연내용을 정리함

- □ 금융위기 (Financial Crisis: The dam, the overflow, and the cracks)
 - 현재의 금융위기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기업의 Business Model의 변화
 - 관련 규제 및 법률의 변경
 - 조세제도
 - 기업 지배구조
 - 자산 거품 (Asset Bubbles)
 - 조세와 금융위기
 - 조세는 확실한 금융위기의 원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 Mortgage 유가증권에 대한 세제혜택
 - ·금융파산을 불러올 수 있는 부채보다 자본에 더 호의적인 조세제도의 편향성

Hybrid Entities

- 금융당국에서는 증권으로 취급하고, 조세당국에서는 부채로 취급되는 복합금융상품(Hybrid Financing)
- 조세차익거래 (Tax Arbitrage) 및 조세회피
- 세제혜택의 거래 : Stock Lending 등
- 조세피난처와 금융위기의 인과관계
 - 많은 수의 페이퍼컴퍼니들(SPVs: Special Purpose Vehicles)이 조세피난처에 설립되었고 역외금융펀드 등을 이용해 투자에 활용
 - 조세피난처에서는 면세 또는 낮은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고, 고객의 금융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미미한 수준의 규제만이 존재함. 또한 주식거래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으며, 무의결권 주식도 인정함
 -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이유는
 - ·금융 중립성 (Financial Neutrality)을 확보할 수 있고, 공격적 조세계획 (Aggressive Tax Planning) 활용에 용이 하며 탈세가 가능하기 때문임

□ 금융위기가 조세제도에 미친 영향

-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막대한 경제회복비용의 지출
 - 이에 따라 향후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세수입의 확대 또는 재정지출 축소 등이 필요

- 실업급여 등 실업구제혜택의 증가 및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
- 자발적 납세의 감소 및 조세회피 등으로 인한 조세당국의 징세 행정 비용 증가
- 조세수입의 감소
 - 모든 종류의 세목에서 수입 감소 현상, 특히 소비세는 즉각적 으로 반응
 - 경기회복 대책의 영향으로 조세수입이 일시 감소
 - 납부 연기 (Payment Deferrals)
 - 조세회피와 탈세의 증가
 - 결손금 이월공제로 인한 미래의 조세수입 감소와 소급공제를 통한 현재의 세수 감소 현상을 나타냄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활용 가능한 정책대안 (Possible Policy Initiatives)

- 부채/자기자본: 금융제도 발전과 금융시장 자유화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조세제도 개혁이 가능한가?
 - 서로 다른 형태의 소득에 대한 상대적인 세율의 변화
 - 부채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법이 있을 수 있음
 - ·이자비용 공제 상한선 도입 (Ceilings on interest relief)
 - ·부채/자본 비율에 대한 규제
 - ·부채 상한선 (Debt Caps)
- 자본/소득: 소득과 자본손실에 대한 조세차원의 불균형이 해소 될 수 있는가?
 - 소득과 자본에 대한 과세형평상의 불균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 자본이득 (Capital Gains) 및 손실에 대한 불균형에 대한 검토
- 이러한 것들이 금융상품의 위험감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 인지에 대한 검토
- 조세당국의 잠재적인 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모범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국제적 조세차익거래

- 복합금융상품의 관련 법률 적용의 불합치로 인한 이중 비과세 (Double Non-Taxation) 또는 납부 연기 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는 잠재적으로 다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 수평적, 수직적 비효율성
 - 금융 불안정성 증가
 - ·조세수입 손실
- 개발도상국의 주요한 영향 (개발도상국의 취약부분을 더욱 악화)
 - 조세피난처를 통한 국제적 조세회피와 탈세 시도
 -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 및 다른 국제 규칙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피해
 - 국제 원조예산에 대한 압박과 해외투자 부족 현상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가 이미 진행
 -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 Exchange of Information
 - 각국의 경험 공유, 능력 배양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이전가격세제를 개발도상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
 -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의 시행 등.